

책의 선물문화 새롭게 열린다

도서상품권 16년만에 부활…4월 15일 발매 시작

‘책’을 매개체로 한 건전한 선물풍토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26일 재무부가 허용한 ‘도서상품권’의 발행이 그동안 운영주체와 세부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체돼 오다가 허용방침 발표 6개월만인 4월 15일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70년에 발행된 바 있는 도서상품권은, 75년 12월 물가안정과 국민의 올바른 소비문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상품권이 당국에 의해 전면금지되면서 다른 상품권들과 함께 통용이 불허되었었는데, 여타의 상품권과는 다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금지된 지 16년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많은 상품권 가운데 유일하게 허용된 도서상품권이 상품권법에 의해 국내 최초로 발행된 것은 한국출판금고가 70년 3월에 내놓은 ‘공통도서권’으로, 도서판매의 촉진과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의도에서 5백원권·1천원권·1천5백원권·2천원권 등 4종을 유통시켰고, 모두 22개의 가맹점을 통해 보급되었었다.

전국 가맹점서 판매·교환

이번에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대표 김현식)가 발행하게 되는 도서상품권은 액면가 5천원권 단일종으로, 전국 4천8백여 서점 가운데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가 추천하고 보급회사측이 인정하는 서점과 지역별 가맹점포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점을 선정해 유통시킬 계획인데,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서점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미 배포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접수하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발권자인 보급회사측은 우선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2백여 서점이 가맹점으로 지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 가맹점에는 가맹점스티커를 서점의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상품권은 가맹점 마크가 부착된 전국의 가맹점에서 공통으로 판매·교환이 가능한데, 책을 선물로 주고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책 고르기의 어려움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책을 선물받게 되는 폐단을 함께 해소시켜 줄 이 도서상품권은 규격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 생일과 입학·졸업 등의 개인적인 경축사와 경품 등 단체의 행사에 긴요하게 소용될 도서상품권의 유통은,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로부터 발행돼, 가맹점을 통해 선물할 사람에게 판매되고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사

도서상품권은 가맹점 마크가 부착된

전국 가맹점에서 공통으로

판매·교환이 가능하다. 규격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구입시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잔액은 서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 외에

공증전화카드와 같은 사용방식의

프리페이드 카드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람은 역시 가맹점에서 액면가에 한하는 단행본·잡지류 등의 도서를 선택해 교환할 수 있다. 구입시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잔액은 서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종이상품권 외에 공증전화카드와 같은 사용방식의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건전한 선물문화의 창출과 양서보급의 촉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재출발한 도서상품권의 발행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재무부의 허가가 발표된 직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는 도서상품권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최초 자본금 5억원 규모의 보급주식회사를 설립해 도서상품권의 발행과 관리업무를 전담케 하고 91년 1월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서 동아출판사가 지배주주가 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금고·출판협동조합 등 3개 출판관련단체와 교보문고가 각각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는 대주주로, 그리고 일반 출판사·서적상을 일반주주로 참여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거듭된 논란으로 한때 철회위기까지

그러나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대표 김석용)가 발행주체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16년만에 부활된 도서상품권은 잡음에 휩싸이게 되었다. 당초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5일 쯤에 발행할 예정이었던 것이 출자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출판·서점계의 불협화음으로 지연되었는데, 미래사(대표 김준목)도 제2의 발권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판계

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서상품권이 이원화라는 불명예스러운 궁지로 몰렸었다.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제출한 사업안이 검토 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서련과 개별출판사 자격으로 출자자를 표명했다가 거절당한 미래사 등의 반대의사 이유는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신규출자가 불가능한 동아출판사가 발권주체로 나설 경우, 두산그룹이라는 재벌회사에 의해 출판계의 공익사업이 운영된다는 출판계의 ‘자존심’의 문제와 설립자본금 5억원 가운데 80%를 동아출판사가 출자하는 지분의 양이 너무 크다는 점에 있었다.

거듭되는 논란으로 한때 당국의 허용철회라는 위기로까지 몰렸던 도서상품권의 발행이 가시화된 것은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가 지난 3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수권자본금 10억원에 설립시 납입자본금 5억원으로 정식발족하면서 그동안의 끊이지 않던 논란은 일단락된 느낌이다.

이날총회에서는 서점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지적된 발권요율과 정산요율의 차이를, 당초의 98% 대 95%에서 모두 95%로 한다는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는데, 보급회사는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3%의 수수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보여왔지만, 서점계의 강력한 요구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판촉물 비용의 서점부담, 도서권 액면가의 20%에 해당하는 잔금 환불, 가맹점의 배정 등에 대한 불만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장명호씨(월드북센터 대표)는 “도서권의 발행목적과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로 하고 있으나,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주주가 사실상 개인이며 가맹계약서 내용도 일방적으로 서점에 책임을 지우는 형식으로 돼 있어 불만이다. 또한 홍보물 비용 등을 서점이 부담해야 되는 점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투자 등 제도정착 위한 노력 필요

한편 보급회사의 실무자는 “도서상품권 사업이 비수익사업이고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인지세 부담과 발권과 정산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소요, 광고선전비 등 회사설립 후 상당 기간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67년부터 도서상

품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설명하면서, 실시초기에는 연간 4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요망된다고 말한다.

지난 89년 도서상품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도서유통개선협의회 회장 이호림씨는 “책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도서권의 주요대상이 단행본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계획속에서 업계의 의견조정절차를 거쳐 범출판·서적계의 지지속에 발행돼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다.

한편 출협관계자는 “도서상품권이 발행되어 5~10년만 제대로 운영이 되면 도서판매가 크게 신장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공익성을 잊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의욕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16년만에 부활돼 도서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선물문화로 인한 국민정서함양에 일조를 할 도서상품권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이해관계로 빚어지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출판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식이 요구된다”는 한 원로출판인의 걱정은 책의 이용도를 한단계 높여줄 도서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귀담아 들어둠 직한 얘기일 것이다.

—최태원 기자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년분 : 값 20,000원

반년분 : 값 11,000원

전화문의: 732-1431~3